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사항

□ 출판사 : (주)금성출판사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지도·도표]</p> <p>▪55쪽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지도 中 천리장성 위치 및 표현법</p>	원문 유지	<p>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고려의 천리장성과는 달리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성곽 표시를 삭제하고 점선 등으로 표시</p> <p>②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천리장성은 동북 기점이 ‘부여성’, 서남 종점은 ‘해(海·바다)’이며, 그 길이가 천여 리에 달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서남 종점인 ‘해(海·바다)’ 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요동반도의 끝 다렌(비사성)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리장성의 서남 출발점을 요동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2	<p>[사진·삽화]</p> <p>▪70쪽 (아프라시아브 공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p>	<p>원문 유지</p>	<p>아프라시아브 공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p>
3	<p>[본문]</p> <p>▪332쪽 (동북 항일 연군)</p> <p>[본문]</p> <p>▪350쪽 (한국 광복군)</p> <p>: 동북 항일 연군과 한국 광복군 서술의 불균형</p>	<p>[원문]</p> <p>……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대들을 결합하여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였다(1933). 동북 인민 혁명군은 민족과 이념을 초월한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1936). 동북 항일 연군은 …… 조선 인민 혁명군이라고 불리었다.</p> <p>한편, 동북 항일 연군 내 조선인들을 기반으로 ……</p> <p>[수정안]</p> <p>……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대들을 결합하여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였다(1933). 동북 인민 혁명군은 이후 민족과 이념을 초월한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1936).</p> <p>한편, 동북 항일 연군 내 조선인들을 기반으로 ……</p>	<p>한국광복군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광복군 서술은 ‘동북항일 연군’ 이나 ‘조선의용군’ 에 대한 서술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p>* 원문 일부 삭제하고 문장 표현 다듬었음. 밑줄 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므로 삭제함</p>	
4	<p>[본문] ■368 ~ 371쪽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 :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371쪽 6~12행] 1946년 2월 남한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무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북한 정부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일성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되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p> <p>[371쪽 8~9행] 한편, 유엔이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으로는</p>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5·10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① 예시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음을 명시</p> <p>②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신탁통치 문제’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6쪽) 또는 ‘좌우 대립과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7쪽)에 서술</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정부 수립에 필요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5	<p>[본문]</p> <p>▪373쪽 (농지개혁) :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p>	원문 유지	<p>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필요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p> <p>【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u>토지리용권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u>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u>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u></p> <p>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u>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u></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6	<p>[본문]</p> <p>▪399쪽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 :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역시 성과가 컸던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p>	원문 유지	<p>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과 1997년 외환 위기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삭제</p>
7	<p>[참고 자료 및 특집]</p> <p>▪407쪽(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 : <더 알아보기> 주체 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으로 ….</p>	원문 유지	<p>참고 자료의 서술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주체사상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였으며,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8	<p>[참고 자료 및 특집]</p> <p>▪419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허구성)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p>	원문 유지	<p>① 독도통합표준홍보 지침에 따라 용어 수정 필요 예시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p> <p>②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라는 표현이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 사료에 충실하여 수정 필요 예시 :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 “독도를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p>

□ 출판사 : 두산동아(주)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본문] · 247쪽 (항일 유격 전쟁을 벌이다)</p> <p>[본문] · 248쪽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 항일 유격대 및 동북 항일 연군 활동과 한국 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 불균형</p>	<p>* 보천보 전투 “... 크게 강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 사건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하였다.”로 수정</p> <p>* 광복군 활동 관련 서술은 원문 유지</p>	<p>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이 본문에 거의 없으며, 생각 넓히기, 탐구활동 등에 분산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광복군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한국광복군 활동을 독립된 주제로 본문에 서술</p>
2	<p>[본문] · 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p>	<p>원문 유지</p>	<p>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p> <p>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 소작 ·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p>【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u>토지리용권은 발갈이하</u> <u>는 농민에게 있다.</u>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u>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u>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u>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u></p>
3	<p>[본문] · 286쪽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p>	<p>원문 유지</p>	<p>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한 점,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4	<p>[본문]</p> <p>· 315쪽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p> <p>: …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p> <p>※ 생각 넓히기 : 조선 민족 제일주의로 민족 명절을 부활시키다.</p>	<p>제목 수정</p> <p>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p> <p>생각 넓히기 제목 수정</p> <p>민속명절을 부활시키다</p>	<p>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① (소주제명 수정)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p> <p>예시② : ‘생각 넓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였음을 서술</p> <p>【참고】</p> <p><김정일이 민족을 강조한 이유></p> <p>“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단순히 우리 민족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u>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데 있다.</u>”(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89)</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5	<p>[본문]</p> <p>· 320쪽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다)</p> <p>: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p>	원문 유지	<p>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p>

□ 출판사 : (주)미래엔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지도·도표]</p> <p>•149쪽 (탐구활동) :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중심 상속으로</p>	<p>“자녀 균분 상속”에서 “차등 상속”으로 수정</p>	<p>① 제시된 도표에는 통계적으로 1750~1850년 기간에 제목과 같은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상속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표 교체 필요</p> <p>② 자료를 제시할 경우 출전 표기 필요</p>
2	<p>[참고자료·특집]</p> <p>•317쪽 (탐구활동) : 6·25 전쟁의 증언 - ... 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p>	<p>탐구활동 2번 문제 수정</p> <p>2. 본문 학습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쓴 이의 주장이 타당한 지 논의해 보자.</p>	<p>제시된 자료는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 필요</p> <p>예시 : 정찰명령 제1호(1950.6.18.), 전투명령 제1호(1950.6.22.) 등</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3	<p>[참고자료·특집] •318쪽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 아! 그렇구나 코너 서술 -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p>	<p>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 이는 1951년 경남 거창 일대에서 무장 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에 의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012년 부산 고등 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 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p>	<p>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 함흥, 영광, 대전 등에서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건</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4	<p>[본문]</p> <p>•322~337쪽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p> <p>: 단원 주제 제목 표기 -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1년 전부터 부정 선거를 준비하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p>	<p>“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을 “4·19 혁명” 으로 수정</p>	<p>소주제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p>
5	<p>[본문]</p> <p>•338~349쪽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p> <p>: 단원 주제 제목 표기 외채 상황 부담이 증가하다, 고도 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p>	<p>“외채 상황 부담이 증가하다” 를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계속하다” 로 수정</p>	<p>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와 문제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므로 경제 발전 성과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p> <p>예시 :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동시대 북한과의 소득 비교 등</p>

□ 출판사 : (주)비상교육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참고자료·특집]</p> <p>▪346쪽(광복과 국토 분단) : 광복 직후 상황 자료 제시 - 소련 치스차코프 포고문 과 미국 맥아더 포고령 단순 비교</p>	<p>포고문 아래 설명을 추가함.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38도선 이북 지역에 구축하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38도선 이남 지역에 구축하여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입장에 있었다.</p>	<p>추가된 설명글이 포고문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표면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체는 인민위원회를 조정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 점 등 추가 설명</p>
2	<p>[본문]</p> <p>▪346 ~ 353쪽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353쪽 12줄을 다음과 같이 서술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함. “북한은 소련의 후원 아래 1946년 2월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p>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우리 민족의 반응’ 소주제 마지막 단락(348쪽) 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 마지막 단락(349쪽)에 서술</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3	<p>[본문]</p> <p>▪353쪽 (북한 정부의 수립) : 북조선 임시 위원회는 친일파들을 축출하였으며,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p>	원문 유지	<p>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p> <p>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 소작 ·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p> <p>【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u>토지리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u>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u>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u></p> <p>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u>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u></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4	<p>[본문]</p> <p>▪389쪽(남북의 대립)</p> <p>: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 한편, 1960 ~ 1970년대 북한은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p>	<p>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4·19 혁명 직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였고, 민간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은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p>	<p>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를 ‘남북의 대립’ 소주제 마지막으로 이동</p>

□ 출판사 : (주)지학사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지도 · 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쪽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하다) <p>: 고조선 관련 유물·유적 분포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고조선의 영역이 일부 축소되어 서술</p>	<p>원문 유지</p>	<p>① 고조선의 영역을 정확히 고증할 수 없으므로 범례명 수정 필요 예시 : “고조선의 영역” → “고조선의 문화 범위”</p> <p>② 고조선의 문화 범위 표시가 집필기준(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고조선의 대체적인 세력범위와 문화권을 이해)과 다르므로 수정 필요 예시 :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과 고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의 분포 지역을 고조선의 문화 범위로 표시</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2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9쪽 (대한제국, 독도가 우리~) <p>: 처음에 일제는 ~ 독도를 침탈하였다.</p>	<p>원문 유지</p>	<p>“처음에 일제는 대한제국으로부터 독도를 임대할 생각이었으나” 서술은 사실 오류이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처음에 일제는 대한제국으로부터 독도를 임대할 생각이었으나” → “처음에 일제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업인의 영토 편입 청원서를 구실로”</p>
3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8~349쪽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p>: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서술 위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서술을 보완하여 수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p> <p>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착착 정비해 간 북한은 이듬해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p>	<p>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좌우합작운동, 이승만의 정읍발언, 남북협상 추진,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다.’ 소주제(346쪽)의 두 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4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2쪽 (공존과 협력 관계가 조성되다) <p>: 더구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p>	<p><해당 문단 서두에 ‘북한’ 이 주체임을 명확히 밝힘. 이로써 다음 문장에 나오는 사건들의 주체가 북한임을 암묵적으로 명시함.></p> <p>이명박 정부 수립 후에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실시하여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p>	<p>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p>

□ 출판사 : (주) 천재교육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84쪽 도표 :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도표	원문 유지	<p>시정전시과의 경우는 자삼, 단삼, 비상, 녹삼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삼의 경우만 18등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표 하단에 표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p> <p>예시 : “일반적으로는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하지만, 시정 전시과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자삼, 단삼, 비상, 녹삼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자삼에 대해서만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p>
2	255쪽 본문 : 이 무렵 경성방직과 ~ 설립되어	한편, 이 무렵으로 수정	<p>경성방직(1919년 설립), 평양메리야스 공장(1906년 경 설립)등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맞도록 수정 필요</p> <p>예시 : “한편, 이 무렵 …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부분을 소주제 처음으로 이동하고, “평양 메리야스 공장과 경성 방직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로 수정</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3	304~311쪽 본문 :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 서술	(311쪽 본문(9~10행)에 내용 보완) 1946년 2월 각 지방의 ... 중앙 권력 기구로서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추진, 이승만의 정읍발언,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대립’ 소주제 마지막 단락(305쪽)에 추가 서술 필요
4	311쪽 본문 :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	원문 유지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p>는데 있으며 <u>토지이용권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u></p> <p>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u>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u></p>
5	318쪽 자료 읽기 :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원문 유지	<p>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도움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 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6	329쪽 자료 읽기 : 자주 노선을 전면내 내세운 북한	<p>(본문 보완)</p> <p>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u>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체제를 표방하였다.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되기 시작하였다.</u></p> <p>(자료의 도움말 보완)</p> <p><u>자료의 ‘우리 당’이란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 지향하였다. 또 외세와 남한의 통일 반대 세력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u></p>	<p>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도움말의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를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을 서술</p>
7	356~357쪽 :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	<p>(356쪽 본문 내용 추가)</p> <p>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 <u>탈북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u></p>	<p>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 제시</p>

□ 출판사 : (주)교학사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 · 보완 결과	수정 명령
1	<p>[대단원도입]</p> <p>▪160쪽(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수립운동) : 19세기 말 조선은 흥선 대원군의 집권으로 세도 정치가 몰락하고</p>	<p>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의 집권으로 세도 정치가 몰락하고</p>	<p>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의 집권이후에도 세도 정치가 몰락하지 않았으며 왕비와 여흥 민씨 일족에게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되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의 집권으로 세도 정치가 몰락하고” → “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여러 개혁 정책이 펼쳐졌으나”</p>
2	<p>[참고자료 및 특집]</p> <p>▪252쪽(이야기 한국사 - 고종 독살설) 고종 독살설 고종은 1월 21일 아침 ... 인산일인 3월 3일에 맞추어진 것이다.</p>	<p>고종의 망명 시도와 독살설 ... <u>한일 합방</u>이 대한 제국 황실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는 고종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p>	<p>‘합방’이란 용어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이므로 수정 필요 예시 : ‘한일 합방’ → ‘한일 병합’</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3	<p>[사료출전]</p> <p>▪257쪽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p> <p>:…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총국 혹은 1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 대륙에서의 침략 전쟁이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p>	<p>…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총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 대륙에서 침략 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p>	<p><출전 표기></p> <p>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p>
4	<p>[본문]</p> <p>▪278쪽(일본 자본의 진출과 경제 구조의 변화)</p> <p>: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 방직 주식회사나 화신 백화점 외에도 ….</p>	<p>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여겨 상공업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의 토착 자본이 투자된 경성 방직 주식회사나 화신 백화점 외에도….</p>	<p>화신 백화점을 민족 자본이나 토착 자본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화신 백화점” 삭제</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5	<p>[본문]</p> <p>▪288쪽 (일제 침략 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p> <p>: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각급 학교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전시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애국지사들은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p>	<p>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다. 학생들도 각급 학교에서 황국 신민화 교육을 받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갔으며,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전시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p>	<p>① 당시 지하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해 온 애국지사들의 민족운동을 축소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삭제</p> <p>② 논리 전개상 문장 위치 조정 필요 예시 :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전시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를 “예술인과 … 동참하였다.” 뒷 부분으로 이동</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6	<p>[참고자료 및 특집]</p> <p>▪292쪽 (이야기 한국사)-: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 까지 은거하였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하였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송진우, 장택상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하였다.</p> <p>학생들의 창씨개명 거부와 학도병 징집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 전문학교장인 그는</p>	<p>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하자, 김성수는 보성 전문학교의 교장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일제가 추진하는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일본식 성명 강요와 학도병 징집 거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 하였다.</p> <p>그러나 1943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김성수 명의로 일제의 징병에 찬성하는 두 편의 글이 실렸다. 또한 임전 보국단 등 전쟁 협력 단체에도 임원으로 그의 이름이 올랐다. 1944년 7월에 고이소 조선 총독이 일본 총리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에 임명되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가 매일신보에 실리기도 하였다.</p> <p>김성수는 1942년 이후 여전히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응준(당시 일본군 대좌,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일본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기도 하면서 교육자로서</p>	<p>김성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있고, 서술된 내용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 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서술 필요</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p>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하였다. 그러나 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의 김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p> <p>김성수는 1942년 이후 요시찰 인물 2급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내사를 당했고, 보성전문학교는 1944년 4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격하당하였다. 그리고 1944</p>	<p>조심스러운 행보를 하였다.</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p>년 7월에는 강압에 의해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여 항복하고 아베 총독이 치안권 이양을 송진우에게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 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p>		
7	<p>[본문] ■305쪽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p>	<p>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의 3·1절 기념대회에 남로당 제주 도위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 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대회 당일, 모르고 아이를 친 기마경찰을 뒤쫓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고, 경찰은 습격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다.</p> <p>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p>	<p>제주 4·3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필요</p> <p>① 예시 : ... “경찰은 습격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다.” → ...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p> <p>② 예시 :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도 있었다.” →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제주 4·3 사건).”</p>

연번	서술 내용	출판사 수정·보완 결과	수정 명령
	<p>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 사건).</p>	<p>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 기관이 습격받았다. …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도 있었다(제주 4·3 사건).</p>	
8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7쪽 (남북한에서의 좌우익 투쟁과 정부 수립) <p>: 친일파 청산의 과제</p> <p>…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p>	<p>친일파 청산의 과제</p> <p>…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하였다고 기자 회견하였다. ….</p>	<p>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이승만 대통령은 …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하였다고 기자 회견하였다.” 삭제</p>